
저자 (Authors)	민병길, 박원익
출처 (Source)	이슈&진단 , 2019.4, 1-27(27 pages) Issue&Analysis , 2019.4, 1-27(27 pages)
발행처 (Publisher)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997215
APA Style	민병길, 박원익 (2019). 미국 오키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이슈&진단, 1-27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이슈&진단

No. 364
2019. 04.03.

GRI

Makes a Better Future for Korea

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 작성 민병길 / 정책분석부 연구위원
(minbk@gri.kr, 031-250-3177)
박원익 / 정책분석부 연구원

목 차

쟁점과 대안

I.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

II. 그린 뉴딜의 배경

III. 그린 뉴딜의 주요내용 및 논쟁점

IV. 정책적 시사점

- 「이슈 & 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슈 & 진단」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발행 | 2019년 04월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전화 | 031-250-3114
• 발행인 | 이한주
<http://www.gri.kr>

Agitators are a set of interfering, meddling people, who come down to some perfectly contented class of the community and sow the seeds of discontent amongst them.

That is the reason why agitators are so absolutely necessary. Without them, in our incomplete state, there would be no advance towards civilization.

선동가들은 간섭하고, 방해하는 일군의 사람들로서, 일부 만족스러운 사회 계층에 와서 그들 사이에 불만의 씨앗을 퍼뜨린다. 그것이 선동가가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이다. 그들 없이는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문명으로 향한 진보는 없을 것이다.

- Oscar Wilde(2007) -

Collected Works of Oscar Wilde :
The Plays, the Poems, the Stories and the
Essays Including De Profundis,
Wordsworth Editions, p.1044.

쟁점과 대안

오카시오-코르테스는 29세 사회운동가이자 히스패닉 여성 정치인으로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최연소 하원의원(민주당)으로 당선됐다. 당선 이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10선 현직 의원을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녀는 정치이력을 시작하기 전에 바텐더 등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가족과 함께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다. 2016년 대선 당시 진보적 대선후보 샌더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으며 이후 ‘민주사회주의자(DSA)’ 등의 진보단체에 가입하며 정치이력을 시작했다.

SNS 소통에 능한 그녀는 파격적 소득·부 재분배 정책을 공약하며 뉴노멀 시대에 성장한 밀레니엄 세대 중심으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에 주류매체와 정치권도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청년층의 급진화에 관심을 쏟는다. 이런 신드롬은 외환위기 이후 각종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기존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청년 비율이 높은 한국사회와 대조되며 특히 청년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를 중심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제안한 그린 뉴딜은 최근 가중된 기후변화 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10년 내에 해소하겠다는 목표 아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규모의 국민적, 경제적, 산업적 동원을 예고하고 있다. 그린 뉴딜은 지난 몇 년간 이슈화된 북미대륙 겨울 기상이변과 금융위기 이래로 해소되지 않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배경으로 급부상 증으로, 정부의 직접투자 강화, 노동자에 대한 보편적인 생활임금·고용 보장 프로그램 운영, 노조 참여권한의 강화 등 과거와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 뉴딜은 미국 진보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정체성 정치’ 일변도를 탈피하며 시민적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빈곤층·중산층 등 다수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시킨다는 뉴딜시대의 보편주의적 기획 및 이상을 부활시키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도 ① 보편적 생활조건 향상에 기반한 사회개혁 정책, ② 사회개혁 추진 시 다수의 참여 확보, ③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정책 필요 등의 시사점을 준다.

I.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

오카시오-코르테스, 미의회 최연소 하원의원 당선 후 차별화된 정치행보

□ 2018년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거물급 정치인과 경선에서 승리한 후 높은 득표율로 하원의원 당선

○ 2018년 6월 26일 조셉 크롤리 하원의원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28세의 정치신인인 오카시오-코르테스(Ocasio-Cortez)가 승리를 거머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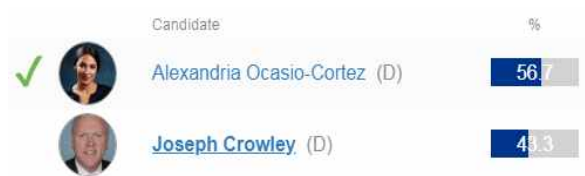
-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의회에서 기업후원을 가장 많이 받는 정치인에게 도전”¹⁾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민주당 하원의원 원내대표 후임자로 유력시되던 정치인 크롤리를 56.7% 대 43.3% 득표율로 따돌리는데 성공

○ 차별화된 메시지와 정책이 주목 받으며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높은 득표율 당선

-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등록금 면제, 고용의 국가책임 강화, 보편적 의료보장, 복지강화 등의 진보적 사회경제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우며 뉴욕 제14 선거구에서 78.2%의 득표율로 당선

- 한편 주요 선거캠페인에서 “브롱스와 퀸스 지역 노동자 가족(working family)의 필요를 위해 뉴욕시민이 단결”할 것을 호소하는 등 노동자 계급에 대한 친화성을 적극 표출

<민주당 경선 결과>



자료 : 볼롯피디아(ballotpedia.org).

<하원의원 선거 결과>

Candidate	Party	Votes	Pct.
✓ Alexandria Ocasio-Cortez	Democrat	110,318	78.2%
Anthony Pappas	Republican	19,202	13.6
Joseph Crowley	Working Families	9,348	6.6
Elizabeth Perri	Conservative	2,254	1.6

141,122 votes, 100% reporting (449 of 449 precincts)

자료 : 뉴욕타임스(www.nytimes.com).

1) 볼롯피디아 홈페이지 오카시오-코르테스 항목(ballotpedia.org/Alexandria_Ocasio-Cortez).

□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의원실 점거한 환경운동가들을 지지 방문하는 등 대안정치인으로서의 선명성 부각

○ 버니 샌더스 대선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한 이후 미국 내 진보적 단체 및 인사와 교류

- 2016년 대선 당시 버니 샌더스 경선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선거 운동 참여자 중심으로 결성된 '새로운 의회(Brand New Congress)'라는 단체에 가입하였고, 이들로부터 뉴욕 제14 선거구 하원의원 출마를 권유받음
- 미국 내 최대 사회주의 단체인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n)' 외에도 민주당 내 진보적 블록인 '정의 민주당원'에 소속됨

○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직무실을 점거한 청년 활동가들을 지지 방문하고 이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시킴

- 썬라이즈 무브먼트라는 기후변화 활동 단체는 기후변화 문제를 경고하는 보고서³⁾가 발표됨에도 특별한 대처가 없자 낸시 펠로시 의원 직무실을 점거함
- 오키오-코르테스는 점거 지지 방문을 통해 미디어의 주목을 끌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별 위원회(Select Committee) 구성에 대한 상·하원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냄

<하원 원내대표 직무실 점거 지지 방문>



자료 : 커먼 드림즈(<https://www.commondreams.org>).

<썬 라이즈 운동 지지하는 상하원 의원명단>



자료 : 썬라이즈무브먼트(<https://www.sunrisemovement.org>).

- 2) 해당 단체는 일한 오마르, 라시다 탈리브, 아이나 프레슬리 등 민주당 소속 유색인종·청년여성 하원의원을 배출
-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산업시대 이전 평균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재앙에 가까운 변화가 찾아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에 비해 45% 정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음.

□ 일부 주류 언론과의 설전을 불사하면서까지 선명성 드러내고 지지자를 결집하며 역으로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냄

○ 선거 캠페인과 의정활동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노동자 계급 출신임을 부각시키며 SNS를 통해 의정활동을 생중계하는 등 대중소통에 민첩한 대응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족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바텐더 등 생계전선에 뛰어든 이력 있으며, 정치이력을 시작하기 전까지 평범한 대학생(보스턴 대학)이었음

-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의정활동, 학창시절 동아리 활동, 요리까지 일상을 생중계하며 이를 통해 유명 스트리머 못지 않은 '정치 팬덤'을 형성

○ 폭스 뉴스(Fox News) 등 유력 보수매체와 설전을 불사하면서 되려 언론 주목

- 의원 당선 이후 폭스 뉴스를 비롯한 보수매체에서 매일 같이 비판 소재로 삼고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이를 되받아치면서 역으로 화제를 일으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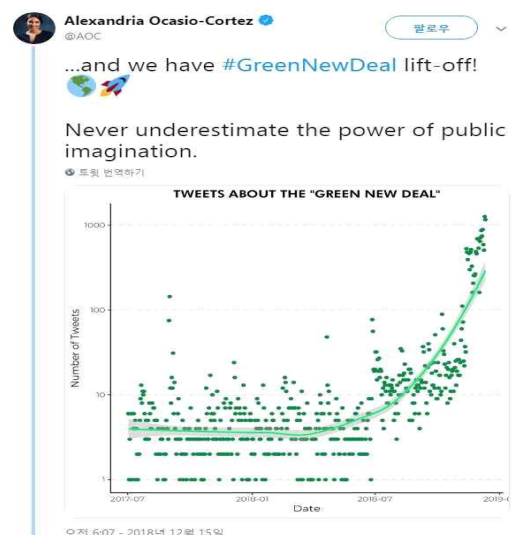
- CNN은 이를 두고 "폭스 뉴스가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을 자신들의 새로운 '악당(Villain)'으로 삼았다"고 평가(2018.11.25.)

<타임스지 표지 사진 선정>



자료 : 타임스(2019년 4월 1일 발간).

<그린 뉴딜 정책 트위터 홍보 현황>



자료 : 오카시오-코르테스 트위터.

불평등에 민감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직접행동에 익숙한 ‘밀레니엄 세대’ 등장, 서구사회 포퓰리즘 약진이 신드롬의 배경

□ 금융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불평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세대 등장

○ 밀레니엄 세대(The Millennials)⁴⁾는 과거의 청년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다수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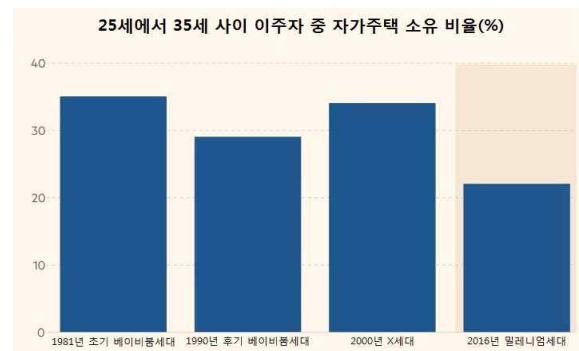
- 2017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밀레니엄 세대의 청년 고용률은 과거의 청년 고용률보다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남
- 과거의 청년세대와 비교하면 밀레니엄 세대의 자가주택 소유 비중이 더 적고 급격한 학비 인상으로 인해 등록금 대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드러남(소비자 대출 중 가장 큰 규모 차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밀레니엄 세대>



자료 : FT Data Millennials.

<이전보다 낮은 청년층 자가주택 소유 비중>



자료 : FT Data Millennials.

○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청년의 생활조건이 불평등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결집력을 강화시킴

- 노동시장 지위 불안정과 자산축적의 기회 박탈 등으로 자식이 부모보다 많은 소득을 벌 확률은 40년대 90% 달했다가 80년대 이후 50%대 이하로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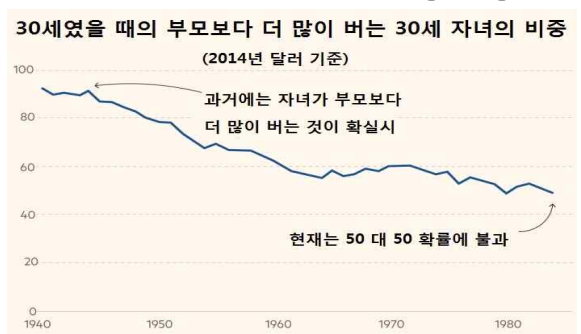
4) 1980~2000년대 출생을 지칭하는 인구학적 코호트 집단으로서 ‘에코 붐 세대(Echo Boom Generation)’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개념을 사용하는 연구자와 언론마다 조금씩 기준이 되는 출생연도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와 자녀세대로서 소셜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익숙하다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로 청년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회복 또한 요원하며 부모보다 낮은 소득을 버는 청년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 불만 폭증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청년고용>



<부모보다 낮은 소득을 얻는 청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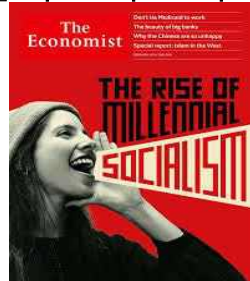


□ ‘밀레니엄 사회주의자’, 오카시오-코르테스 비롯한 급진 정치인 열성 지지 집단 형성

- 미국 비롯한 서구사회의 청년들 사이에서 반자본주의 정서 강화되는 경향이 포착
 - 18~29세 미국인의 51%는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2016년 민주당 경선 당시 청년계층은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많은 표를 버니 샌더스에게 몰아주었음(이코노미스트, 2019.02.16.)
 - 24세 미만 프랑스 유권자 1/3은 2017년 대선 극좌후보(장뤽 멜랑송)에 투표
- 이코노미스트지(紙)는 급진화된 청년세대를 ‘밀레니엄 사회주의’로 명명
 - 금융위기 직후 뉴 노멀(New Normal)⁵⁾ 시기에 성장한 반면 냉전을 겪지 않은 서구사회의 청년세대는 ‘사회주의’와 결부된 과거 정치적 금기로부터 자유로우며 소득과 부의 급진적 재분배에 거부감 적음
 - 소셜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며 집합적 행동을 통해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신뢰가 기성세대보다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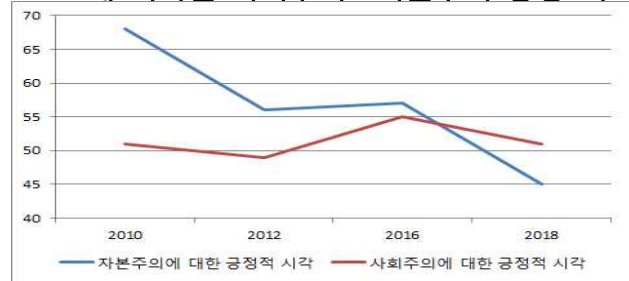
5) 뉴 노멀(New Normal)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부터 이어진 경제적 침체 기간 동안 만들어진 경제적 표준을 의미한다.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2월 이코노미스트지 표지>



자료 : 이코노미스트(2019년 2월 발간).

<18~29세 미국인 사회주의·자본주의 긍정 시각>



자료 : 미국 갤럽.

□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인기는 포퓰리즘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과 포퓰리즘 정치는 불가피한 민주주의적 변화 흐름이라는 주장 팽팽히 맞섬

○ 일부 주류 매체는 급진정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열광은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치라고 우려함

- 시카고 트리뷴지(紙)에서는 오카시오-코르테스를 두고 (비타협적이고 규범 파괴적이라는 측면에서) “트럼프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안타-트럼프 정치인”이라고 논평하며 정치적 미숙함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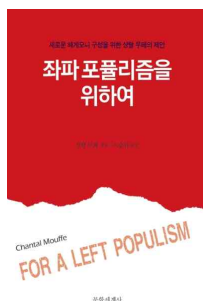
- 포퓰리즘은 의회정치와 민주주의 악영향 초래한다고 경계하는 시각도 있음

○ 한편,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정치의 등장은 불가피한 시대적 조류라고 옹호

-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때 좌우 양쪽의 포퓰리즘 정치의 등장은 필연적 수순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됨

- 아울러 일부 논자는 포퓰리즘 정치는 민주주의 본연의 정치 방식이라 지적

<상탈 무페,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주요 내용>



- 선구적인 포퓰리즘 정치 연구자인 에르네스토 라클라우는 『포퓰리즘적 이성』에서 포퓰리즘을 단순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닌 정치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구조와 결부시켜 설명
- 또한 라클라우와 상탈 무페는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에서 정치의식과 정체성이 경제적 조건(계급)에 의해 규정된다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비판하며 정치의식과 정체성은 ‘다수 민중’ 전체의 요구를 수렴해 나가는 역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
-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은 ‘다수 민중’과 ‘사회 전체’를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여러 세력 간의 경합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는 민중과 사회 외부의 적대자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적대적·갈등적이며 특히 포퓰리즘 정치와 친화적
- 상탈 무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신자유주의 합의에 균열 생겼음을 주장하며, 이 합의에 기반한 ‘포스트 정치’ 시대를 ‘포퓰리즘 정치전략’이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

자료 : 경기연구원(2019) 작성.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노란조끼 시위’ 직면한 마크롱과 대조적 모습

□ 마크롱은 참신한 젊은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특권 옹호 이미지가 고착되면서 경제적 빈곤과 불평등에 시달리는 청년으로부터 외면

○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근본적 배경은 유류세 인상과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이며 이 중 특히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심화

- 18~29세 프랑스 청년 중위 연소득은 2016년 기준 18,890유로로 전체 연령대 평균 20,520유로에 못 미치는 수준⁶⁾

- ‘환경보호’ 명목의 유류세 인상과 최대속도 감속 조치가 누적된 경제적 불만을 점화하며 특권층·엘리트 옹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고착시킴

□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환경·시민운동가들과 함께하며 ‘그린 뉴딜’ 정책 제시를 통해 대선 공약으로 부상시키면서 대중과 청년의 지지 확산

○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함께 ‘그린 뉴딜’ 정책을 하원이 연방정부에 요구하는 형태인 결의안으로 제출(2019.02.07)

-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작년 11월 펠로시 집무실 점거농성한 환경운동가 단체와 연대하면서 12월 민주당 하원의 공식요구에 의해 정책을 만들

- 4명의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를 포함한 64명 하원의원과 9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하며 2020년 대선의 민주당 대표 공약으로 부상

<2019년 2월 7일 공개된 그린 뉴딜 주요 발의자 명단>



자료 : 뉴욕타임스(www.nytimes.com).

- 에드워드 마키(메사추세츠 민주당 상원의원)
-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 키어스틴 질리브랜드(뉴욕 민주당 상원의원)*
- 코리 부커(뉴저지 민주당 상원의원)*
-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민주당 상원의원)*

주 : 별표(*)는 차기 민주당 대선주자

자료 : 경기연구원(2019) 작성.

6) 김은경(2019).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및 시사점”, 『이슈&진단』, 제361호, p.6.

Ⅱ. 그린 뉴딜의 배경

북미대륙 강타한 겨울 이상기후와 정치권 극장대응이 대중 불만 초래

□ 지난 2년간 북미대륙은 산불, 강풍, 한파, 폭설 등 이상기후에 시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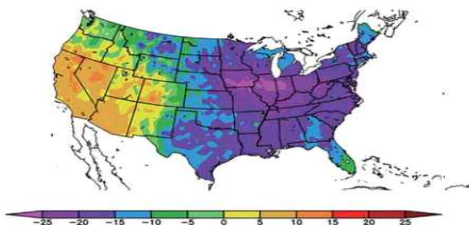
○ 지구온난화로 형성된 ‘폭탄 사이클론’으로 인해 폭설·강풍·한파 등 피해 발생

-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 제트기류 약화 → 북극 한기 남하’로 인해 북미·유럽 한파 및 이상기후 발생했다고 분석

- 2017~8년에 이어 2018~9년에도 북미대륙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상당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 : (예) 2019년 1~2월 발생한 겨울폭풍과 기습한파로 최소 22명의 사망자 발생

<2018년 미국 기온 평년 편차도>

Departure from Normal Temperature (F)
1/1/2018 - 1/5/2018



자료 :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climate.go.kr>).

<한파/폭설 발생시킨 ‘폭탄 사이클론’ 모사도>



자료 :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climate.go.kr>).

□ 2018년 말 발표된 IPCC 지구 온난화 보고서는 기후변화 논란 재점화

○ IPCC⁷⁾는 2018년 10월 경 발표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묶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

- 지구온도 상승폭을 전산업시대와 비교해 1.5℃로 억제하는 것이 2℃ 온난화에 비해 기후변화 파괴적 영향력을 크게 막을 수 있다고 분석⁸⁾

7) IPCC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약자이며,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함께 만든 국제기구

- 기온상승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까지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 중단해야 함)
- 국제사회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처하지 않으면 21세기말까지 지구 기온이 1850년대보다 3도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함
- 기후변화 대책의 시급성을 시사하는 사건·사고와 IPCC 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미국 정치권의 느장 대응이 대중의 성난 여론 자극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단체에서 만들었는지 알고 싶다, 멋진 보고서들이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보고서들이 있다”고 발언하며 보고서의 진위를 의심하는 발언(허핑턴포스트, 2018.10.10.)
- 중간선거 이후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 역시 2018년 11월 경 발표한 법안 발의 우선순위 리스트에 기후변화 문제가 빠져 있는 등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 집무실 점거 사태를 초래함(본문 2p 참조)

<2019년 1~2월 북미 한파 주요사건>

구분	개요
1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 폭풍 발생으로 펜실베이니아, 뉴저지에서 비상사태 발령(3명 사망) - 이상 기후로 인해 1월 21일 4,800 건의 비행이 취소되고 3,000건이 지연 - 15중 차량 추돌 사고로 미주리 주 55번 주간 고속도로 폐쇄 - 폭설과 폭풍으로 코네티컷과 오하이오 주에서 각각 28,000명 및 3,000명 단전 피해
1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소용돌이로 인해 중서부와 오대호 지역에서 15~35cm 적설량의 눈보라 발생 - 눈보라 직후 사상 초유의 한파(최저 섭씨 영하 48도) 중서부 도시(시카고 등지)에서 발생 - 이상 한파로 시카고 지역 주요 교통, 교육, 문화, 공공시설 폐쇄
2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8일경 미시간 주 160,000명이 강풍으로 인해 단전 피해 입음 - 같은 시점 워싱턴 주는 최대 20cm 적설량을 동반한 겨울폭풍으로 인해 비상사태 발령 - 25cm의 강설량으로 인해 시애틀-타코마 공항에서 180건의 비행편 취소
2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22일 애리조나 주 플래그스태프시(市)에서 102cm 폭설 내려 비상사태 선포됨 - 23일 강풍으로 인해 오대호 주변 도시에 비상사태 내려지고 미시간 주에서 90,000명 단전피해 입음

자료 : 경기연구원(2019) 작성.

불평등 · 고용불안의 지속과 주요 개혁 좌초도 급진주의 대두 배경

□ 상위 1~10%의 소득 · 자산 편중이 심화됐지만 금융위기 이후 뚜렷한 개선 없음

○ 미국은 세계적으로 부와 자산의 불평등이 심한 나라이며 80년대 이후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됨

- 2014년 기준으로 상위 1%, 10%가 각각 소득의 20.2%, 47.0% 가져가고, 부의 37.2%, 73.0%를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80년대 이래로 이러한 경제력의 편중은 지속적으로 악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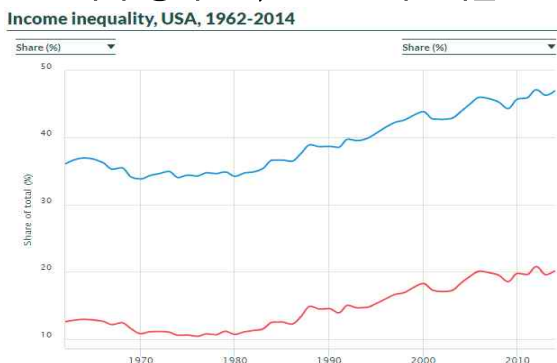
- 미국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영국의 0.351(2016년)마저 크게 앞서고 있으면서 동시에 1993년 0.369에서 2016년 0.391로 증가세 지속⁹⁾

○ 표면적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 불안정 고용으로 가계소득 회복 제한적

- 2017~18년의 유래 없는 고용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 불안정 노동 확산으로 미국의 임금상승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도 못 미쳐 가계소득 회복은 제한적 : 2000~07년 3.2% → 2017년 2.3% → 2018년 5월 2.8%

- 이에 고용안정의 정부 · 사회 책임 강화가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추진하는 새 그린 뉴딜 계획의 주요 의제가 됨

<미국 상위 1%, 10% 소득분배율>



주 : 빨간색 상위 1%, 파란색 상위 10%

자료 : World Inequality Database.

<상위 1% 소득분배율 국가 간 비교>



자료 : World Inequality Database.

9)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 오바마 행정부 개혁의 좌초·후퇴가 민주당 일각의 급진주의 부활·강화

○ 트럼프 정부에서 부자감세,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 등 개혁 후퇴 가시화

- 2017년 20일 법인세(35%→21%)·소득세(최고소득세율 39.6%→37%) 인하안이 하원 통과했으며, 이러한 감세안에 대한 반대편의 불만은 역으로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위시한 ‘최고 소득세율 70%’ 주장을 낳음
-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차례 오바마 케어 폐지를 추진하고 2019년부터 오바마 케어 미가입자 벌금이 폐지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이 다시 한 번 축소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

○ 오바마 행정부가 입안하고 추진한 그린 뉴딜 정책이 좌초한 것 또한 이후 ‘더 급진화된’ 새로운 그린 뉴딜 정책을 불러일으키게 된 계기

- 최초의 ‘그린 뉴딜’은 2008년 오바마 행정부의 공약 및 정책으로 채택되어 환경위기, 고용위기, 저성장 등을 탈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탄소·녹색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강조되었음
- 2017년 6월 기점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에 불공정한 이익을 주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명분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함으로써 기존의 친환경·녹색에너지 정책노선 전면 수정됨

<오바마 그린 뉴딜의 주요 내용과 논란>



자료 : 미국 백악관.

-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탈피를 골자로 한 ‘그린 뉴딜’이 2008년 새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의 핵심 공약이 되었고, 첫 번째 법안으로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입법
- 두 번째 대선에서 60조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와 관련 분야 제조업 세금감면 공약 발표하고, 임기 말에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발표
- 테슬라 같은 전기차 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 기반 마련했다는 평가가 존재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산업 500만개의 일자리 창출, 탄소배출 획기적 감축이라는 당초 목표엔 미흡했다는 평가도 공존
- 한편, 나오미 클라인 등 비판가들은 『This Changes Everything: Capitalism vs the Climate』 등의 저서에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영리활동 그 자체라고 지적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비판
- 기존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와 노동자와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기존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트럼프의 선전에 발미 주었다는 주장도 존재

자료 : 경기연구원(2019) 작성.

Ⅲ. 그린 뉴딜의 주요내용 및 논쟁점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 사회개혁 프로그램

□ 기후변화 저지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 신재생에너지 · 친환경 산업 및 생활 인프라 투자 → 탈·탄소 경제로 이행을 구상

○ 그린 뉴딜 정책은 ‘탈·탄소 경제(decarbonized economy)’ 뿐만 아니라 ‘탈·탄소 생활 · 교통 · 공공 인프라’를 지향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전기 에너지를 100% 재생가능(renewable) 에너지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10년 내 실현할 것을 공언

-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생활 인프라 및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 : 화석연료 기반 공공 교통수단을 전기차로 대체하고 미국 내 대다수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

○ 환경자원에 대한 기본권 회복이 주요 내용 중 하나이며,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하고 2030년이라는 실행 타임라인을 명확히 함

- 메탄 배출량 감축과 노후 식수관 및 납 파이프 교체, 공공 및 민간의 유희부지 녹지화 및 공공개방, 습지복원, 농지에 지속가능한 농사법을 보급하는 사업 실시, 오염 토지에 대한 복원사업 등 포함

- 깨끗한 물과 공기, 지속가능한 환경, 기후변화 재해로부터의 안전한 환경 구축, 건강한 음식 보장할 것을 결의안에 명시

- ‘그린 뉴딜 결의안 → 특별위원회 설치 → 그린 뉴딜 계획 입안 · 실행’으로 구상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조사, 연구, 공청회를 통해 그린 뉴딜 계획안을 입안하며, 2020년 1월까지 계획안을 완성하고 10년 내에 계획을 실행한다는 타임라인 제시하면서 정책추진 의지를 강력히 피력

□ 대규모 정부투자로 완전고용·소득증진·사회정의 추구, 과거 정책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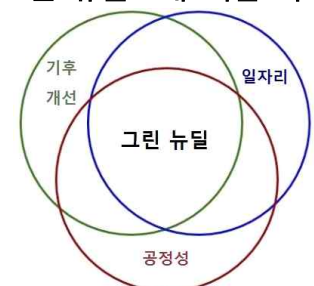
- 2차 세계대전과 뉴딜 정책 규모에 맞먹는 국민적, 경제적 자원 동원 예고하며 국가의 고용보장 및 소득보장이 그린 뉴딜 경제정책의 핵심 내용
 - 노동, 의료, 주택, 생활 인프라, 무역, 산업, 환경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으로 완전고용을 정책목표로 명시하는 등 뉴딜 계승을 명문화하고, 미국 사회의 경제민주화 및 공공부문과 시민참여의 강화도 목표로 함¹⁰⁾
 - “이번과 같은 규모의 국민적, 산업적, 경제적 동원은 미국사회에서 빈곤을 근절하고 전환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번영과 부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역사적 기회이다”(결의안 내용 中)
 -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고용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공언하면서 정책에 영향 받는 이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임금, 직업훈련 기회를 보장할 것 명시
- 기후변화, 환경오염, 불평등 심화로 고통 받는 소수자·약자·취약계층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조 강화도 추진
 - 뉴딜정신을 계승하되, 인종·젠더·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과거 뉴딜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반성이 담겼으며, 에너지 전환 및 정부투자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
 -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보호 결의안에 명시 : “모든 노동자가 조직하고,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한다”

<뉴딜 정책이 미국인에게 의미하는 것>

- 그린 뉴딜 결의안에서 “2차 세계대전과 뉴딜 기간 동안의 정부 주도의 동원은 전례 없는 규모의 중산층을 창출했다”고 평가
- 일각에서는 뉴딜 정책이 대공황 이후 경제위기 탈출에 미친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지만, 뉴딜 정책이 의미하는 것은 보다 심원한 도덕적, 사회심리적, 국민적 일체감과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 제기됨
- “루스벨트 체제는, 시민이 위험과 곤경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기본권의 부정에 맞서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미국을 그렸다. 표어는 연대, 기회, 공적 의무였다.” - 마크 릴라,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 中 -

자료 : 경기연구원(2019) 작성.

<그린 뉴딜 3대 핵심 목표>



자료 : Sierra Club website.

10) “The Green New Deal, Explained”, Vox(2019.2.23).

<그린 뉴딜 결의안 및 부록 주요 내용 요약>

I. 그린 뉴딜 추진의 배경 (1) - 환경

2018년 10월 IPCC의 “1.5℃ 지구 온난화에 대한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 1) 인간 활동은 지난 1세기 동안 관찰된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
- 2)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산불의 증가, 심각한 폭풍, 가뭄과 같은 인간 삶과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필수적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극단적 기상사건을 야기
- 3) 산업시대 이전보다 2℃ 이상의 지구 온난화는 다음 결과를 초래 : (A) 기후변화에 영향 받는 지역으로부터의 대규모 이주 (B) 2100년까지 5천억 달러 이상의 연간 경제적 산출물 손실 (C) 2050년까지 2019년 이전 몇 년간 서부 미국에서 산불로 불탄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산림 면적이 매년 산불로 불탄 것 (D) 지구상의 99%의 산호초가 파괴될 것 (E) 2050년까지 지구적으로 3억 5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치명적 열사병에 노출될 것 (F) 1조 달러 가량의 공공 기반시설과 해안가 부동산의 훼손 위험
- 4) 기후 변화의 심각한 여파를 피하기 위해 산업시대 이전보다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하가 요구된다 : (A) 전세계적으로 인간이 유발한 온실 가스 배출을 2010년 수준의 4~60%만큼 2030년까지 감축 (B) 2050년까지 순-제로(net-zero) 지구적 온실가스 달성

II. 그린 뉴딜 추진의 배경 (2) - 경제

- 1) 깨끗한 물과 공기, 건강한 음식, 충분한 의료, 주거, 교통 그리고 교육 등 기본적 필수재가 미국 인구의 상당부분에게 접근 불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기대수명이 줄어들고 있음
- 2) 지난 40년간의 임금 정체, 탈산업화, 그리고 반 노동정책은 다음 결과를 초래 : (A) 노동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이래로 평균시급 정체 (B) 금융위기 이전까지 선진국 중 세 번째로 낮은 사회경제적 이동성 (C) 미국 노동자의 소득과 교섭력의 저하 (D)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도전에 직면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를 위한 자원의 부족
- 3) 1920년대 이래의 최대 소득 불평등 : (A) 상위 1% 소득자가 금융위기 직후 수년간 경제 회복기 성과의 91%를 가져감 (B) 평균 백인가족과 평균 흑인가족 사이에 20배 이상의 자산 격차에 달하는 거대한 부의 인종적 분리 (C) 여성의 중위 소득이 남성의 80%에 달하는 젠더 소득 격차

III. 그린 뉴딜의 목표 (1) - 환경

(1) 현존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크게 확장하고 설비를 신규 배치하여 국가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충족 (2) 국가적 규모로 에너지 효율적 스마트 그리드 구축 (3) 최고등급 에너지 효율과 안전 그리고 편의성을 위해 모든 주거 및 산업용 건물 개선 (4) 커뮤니티의 소규모 농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제조업, 농업 등 기타 산업에서의 온실 가스 배출 근절 (5) 교통 및 여타 기반시설 향상·수리 통해 온실가스 배출 근절하고 수도시설을 개선해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 (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기금 조성 (7) 지구적 그린 뉴딜을 가져오고 타 국가가 온실가스 중립적 경제로 완전히 이행하도록 돕는 데 미국이 명실상부한 지도적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녹색 기술, 산업, 전문역량, 재화 그리고 용역을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만들

IV. 그린 뉴딜의 목표 (2) - 경제

(1) 에너지 전환에 있어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및 공동체 불문 우리 사회의 모든 멤버에게 기회와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특히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직업 보장 프로그램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제공 (2) 지역 경제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산업이 노동시장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커뮤니티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며 모든 노동자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 필요한 도구, 기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노동 및 작업장 안전과 최저임금 규제를 강하게 부과하고 노동자들이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조직하고 노조를 결성할 권리 보장 (4) 모든 노동자에게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보장 (5) 원주민의 토지 및 권리 보호 (6) 소득과 부의 인종적, 지역적, 젠더 불평등 완화 (7) 기본소득 프로그램과 보편적 의료보장제 등 추가적 조치 포함 (8) 전국적, 지역적 노동조합이 직업훈련과 배치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 취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자료 : 경기연구원(2019) 작성.

그린 뉴딜의 실현가능성과 동력확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란 존재

□ 단기간 내에 탈-탄소 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해소와 이해 충돌 문제 해결 및 정치적 동력 확보는 여전히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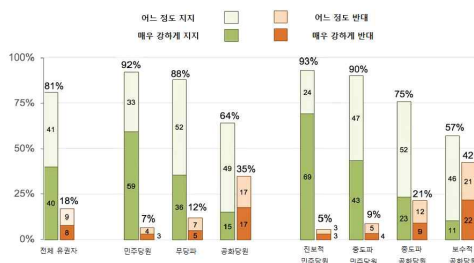
○ 그린 뉴딜 결의안에는 2020년 내 계획안을 마련하고 10년 내 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실현할 것을 명시했으나, 실현가능성에는 의문점 존재

- 중화학 공업 및 대규모·원거리 수송 등 당장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산업 및 운송 분야는 단기간 내 목표실현의 어려움으로 작용
- 그린 뉴딜에 우호적인 일부 전문가도 보다 완화된 목표를 제시(Jenkins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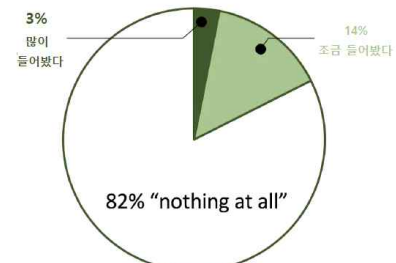
○ 그린 뉴딜에 대한 여론 환기에는 성공했지만 의회 및 미디어 정치·이념 공세와 이익충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정치적 동력 확보는 여전히 과제

-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일단 우호적이지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고, 일부 매체 및 정치권에서 ‘사회주의’ 등의 이념논쟁 일으키는 것도 변수¹²⁾
- 민주당 비주류 정치세력의 한계 극복은 물론, 전국 광산노조(UMWA)와 같이 일자리 파괴 우려하는 노조 등을 설득하는 것도 정치적 과제¹³⁾

<그린 뉴딜 여론에 대한 여론>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 인지도>



자료 : Yale Program on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자료 : Yale Program on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11) Jenkins et al(2018), "Getting to Zero Carbon Emissions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Joule* 2(12) : 2498-2510.

12) "美 '그린 뉴딜' 정책의 본모습은 사회주의", 에포크타임스(2019.2.28).

13) "Labor unions fear Democrat's Green New Deal poses job threat", Reuters(2019.2.12.).

□ 부자증세와 대규모 국채발행 등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쟁 진행 중

○ 오키오-코르테스는 소득세 최고세율 70%로 인상, 상속세·증여세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것만으로는 그린 뉴딜 재원으로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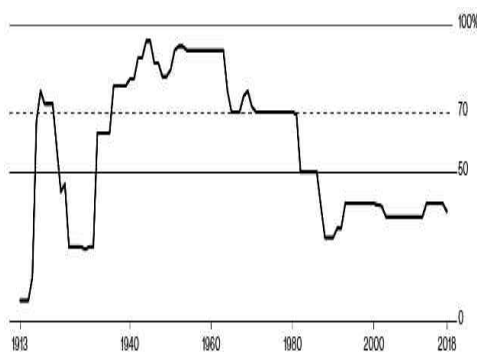
- 그린 뉴딜 결의안에 따르면 수백만의 일자리 창출, 전국의 산업·도시 인프라 개선 위해 천문학적 재원 필요하며, 현실적으로는 과거 2차 대전과 뉴딜 정책처럼 대규모 국채발행과 적자재정 편성 필요

○ 완전고용 위한 적자재정 옹호 ‘현대화폐이론(MMT)’이 근거이지만 논란 진행 중

- ① 조세징수권·법정화폐(fiat money) 발행권 가진 국가의 지출은 세입의 제약 안 받고,¹⁴⁾ ② 세입-세출 균형이 아닌 경제의 유휴자원 및 설비 존재 여부가 중요하며, ③ 완전고용 달성 위한 적자재정 편성은 규모 관계없이 바람직하며 기계적 균형재정이 오히려 경제에 해롭다는 입장

- 케인스, 칼도어, 칼레츠키, 로빈슨 등의 영향 받은 포스트케인스 경제학자들의 재정·화폐 이론으로 인터넷 매체 등으로 지지층을 얻은 MMT는 샌더스·코빈 등 좌파정당 및 정치인에게 수용됐으며 그린 뉴딜의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하지만, 일각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제기

<미국의 최고 소득 세율 변화>



자료 : “Alexandria Ocasio-Cortez Is the Darling of the Left, Nightmare of the Right”, Tax policy center, Bloomberg Businessweek(2019.2.17.)에서 재인용.

<현대화폐이론과 이를 둘러싼 논란 및 핵심 쟁점>

- 사상적 원류 : 케인스가 『화폐론(Treatise on Money)』에서 국가가 민간에서 사용할 화폐와 유통되는 화폐량을 결정할 힘이 있다는 사고 제시했고, 이는 후일 칼도어, 칼레츠키, 로빈슨, 무어, 민스키 등의 포스트케인스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계승되며 궁극적으로 ‘정부재정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는 사고로 발전
- 지지하는 학자 : 제임스 K. 갈브레이스, 스테파니 칼튼, 빌 마셜 L. 랜덜 레이, 스코트 풀워러
- 주류경제학의 반대론 : “정부는 원칙적으로 돈을 발행할 수 있고 절대 파산하지 않지만 그것은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은행 시스템의 파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파산이 더 나은 옵션이 될 수 있음(그레고리 멘류).”
- 현대화폐이론 재반박 : 주류경제학은 완전고용, 완전 설비기동 등 시장에 의해 자원이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된다고 가정하지만 MMT 지지하는 경제학자는 이 같은 전제 거부하며 불안정 고용과 유휴설비 존재 시 적자재정이 반드시 인플레이션 일으키는 않는다고 반론

자료 : “MMT is an unconventional take on economic strategy”, Washington Post(2012.2.18).

14)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에 따르면 조세는 정부지출 재원 조달이 아닌 1) 경기조절 2) 법정 화폐 사용 강제 등의 기능을 가짐.

IV. 정책적 시사점

보편적 생활조건 향상 기반 소수자·약자 배려정책이 대중의 지지 확보

□ 그린 뉴딜 정책의 의의는 ‘보편주의적’ 기획의 부활이라는 점에 있음

○ 그린 뉴딜 정책은 ‘뉴 노멀’ 시대에 적합한 보편적·진보적 사회 프로젝트

- 저성장과 불안정 고용구조 고착되자 효율적 시장성과를 우선시하고 복지 등의 사후적 재분배 꾀하는 ‘제3의 길’ 노선보다는 정부의 직접 개입과 집합적 소유 및 운영과 같은 ‘경제민주화’ 의제가 설득력 얻음
- 미국사회의 경우 ‘모두가 사회를 개선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뉴딜 시대의 비전에 대한 대중의 향수를 성공적으로 불러일으킴

○ 그린 뉴딜은 다수의 생활 향상을 공약하며 ‘소수자 우대’ 둘러싼 오랜 논란을 걷어냄

- 미국 민주당이 과거 뉴딜정책 이후 보편적 사회비전을 제시 못하고 개별적 인종·젠더·정체성 이슈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오랜 기간 제기됐으며, 특히 적극적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¹⁵⁾은 역차별 논란을 일으킴
- 그린 뉴딜의 경우, 오랜 기간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린 미국 다수 중산층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

<적극적 우대정책에 대한 미국 내 논란>

“보다 매력적인 제3의 길은 가능하다. 모든 인종의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50년도 더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모든 인종의 노동계급을 포용하는 경로를 제안할 때 그는 옳았다.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 도널드 트럼프의 시대에, 모든 인종의 잊혀지고 소외된 이들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리처드 칼렌베르그, “적극적 우대조치는 인종이 아닌 계급에 기반해야” 中 -

자료 : 이코노미스트(www.debates.economist.com).

<하층계급과 점점 잃은 미국 민주당 내부 비판>

“예전의 시스템 하에서 적어도 우리 사회는 가장 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중략) 빌 클린턴이 1996년 복지개혁에 서명한 이래 가난한 노동계급 미국 여성들에게 바닥은 치워져서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졌다. 후대전화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육비를 지급할 정부 부처는 없어졌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도록 만든 사람들 중 한 명이 내가 보기에 세계의 탄압받는 여성들의 챔피언으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로 그 여성(힐러리 클린턴)이다.”

- 토머스 프랭크, “Nor a lender be” 中 -

자료 :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랭크 블로그(www.harpers.org/blog).

15) 적극적 우대정책은 고용과 대학입학 등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로 간주되는 성·인종을 우대하는 정책

□ 중산층·하위계층 등 다수 아우르는 ‘정책 플랫폼’ 형성으로 ‘계층 내 갈등’ 최소화 전략 추구

- 그린 뉴딜은 활동가·전문가 의제가 아닌 대중 의제를 반영하는 정책플랫폼 지향
 - “그린 뉴딜 정책은 본질적으로 사회 민주적 형태의 포퓰리즘이며, 그 의도는 21세기에 적합한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권을 확장하고 빈곤층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물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¹⁶⁾
 - 그린 뉴딜 정책은 개별적 생태·인종·젠더 의제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며, 이러한 의제 모두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통합되어 있음
-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은 사회개혁 정책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사회적 주목과 확산력 갖는다는 점 웅변
 - 그린 뉴딜 결의안이 ‘특별위원회’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을 받는 노조의 참여 보장을 명시한 점도 각종 사회갈등을 겪는 한국에 시사적
 -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개혁 영향을 받는 계층에게 개혁의 추상적 당위성만을 역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혁을 통해 돌아갈 수 있는 장·단기적인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득해야 함

<사회 개혁이 계층 갈등 야기한 사례>

청년계층 내 젠더갈등 심화	병역거부자 처벌 위험 판결 20대 반발 여론	고졸 노동자에 대한 할당제 논란
1) 12월 2주차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57%가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성갈등을 응답 2) 해법 - 추상적 당위 나열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득 - (예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임금격차 해소는 과도한 노동 시간 단축과 경제적 부양의무 일방전가 문제 해소할 수 있음	1) 대법원의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후 20대 지지율 하락 - 군필자에 대한 역차별론 제기되며 불만여론 확산 2) 해법 - 시민권의 보장은 소수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수행했던 다수 군필자에게도 해당됨을 분명히 해야 함 - 군인 임금 및 복지 개선, 전역 후 군복무 기간의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확대, 병사 외출·외박 자율화 더욱 확대	1) 고졸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할당제 논의가 논란 야기 - 고졸 노동자가 대졸노동자에 비해 임금, 복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 고졸채용 비중 확대 2) 해법 - 할당제 확대를 장애인과 빈곤층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외 계층에 한정 - 고용과 노동자 처우개선의 국가 및 사회 책임을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성 추구

자료 : 경기연구원(2019) 작성.

16) “The Green New Deal, Explained”, Vox(2019.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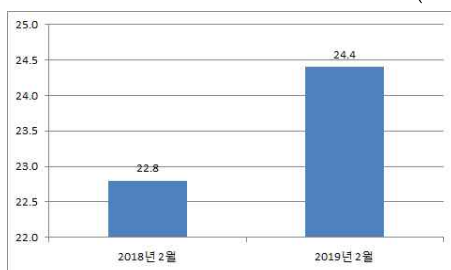
사회개혁 추진 시 정책 수혜자의 직접 참여 통한 정치사회적 만족 필요

□ 사회경제적 개혁 일방적 수혜·부담계층이 아니라 주권자라는 인식 확보

- 정책실행에 뒤따르는 수혜자·부담자 논란 해소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폭넓은 참여 확보해야 함
 -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해서 사회개혁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지닌 취약계층에도 다가가야 함
- 한국 청년들은 경제 불안정에 시달리면서도 기성정치에 불신이 높은 계층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정책혜택으로 아우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청년 확장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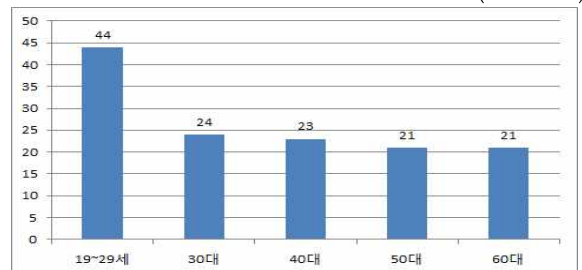
(단위 : %)



주 : 확장 실업률은 '공시직' 등 실질적 실업자 포함한 개념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20대 '지지정당 없음' 비율>

(단위 : %)



주 : 2019년 2월 기준
자료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 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장을 공언한 그린 뉴딜은 한국 노동정책에도 시사적

- 그린 뉴딜은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침해 논란 일었던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대조
 - 광주형 일자리 참여 기업이 독립법인 통해 기존 단체협약 우회할 수 있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노사민정 거버넌스로 결정한다는 점 때문에 노조 교섭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한다는 지적 제기¹⁷⁾
- 경기도에서 출범한(2019.3.22.) 노동권익센터도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활동가, 기존 노동조합의 참여를 확보해야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보임

17) “현대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반대 목소리 더 높인다”, 참여와 혁신(2018.11.15).

사회개혁 추진 시 계층별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탈원전 공약에 제동 걸린 사건은 반면교사

-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정 따라 신규 원전건설 중단 등 문재인 정부 탈원전 공약의 일부 재검토됨
 - 숙의민주주의 기구인 공론화위 토론 거듭할수록 여론 유보층은 감소 (35.8%→3.3%), 공사재개 의견이 다수 됨(공사재개 59.5% vs 중단 40.5%)
 - 탈원전 측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외에 탈원전 이후의 긍정적 변화상 및 사회적 이익 제시 못함으로써 사회적 명분 및 여론전에서 밀림
- 향후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 육성 추진 시 이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일자리 및 소득 증진)과 기존 산업 노동자 구제방안 필요

□ 서민생활 광범위한 타격 줄 수 있는 정책보다 개선하는 정책 지향해야 함

- 그린 뉴딜 정책은 국민 저항 초래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 유류세 인상안과 대비
 - 마크롱 정부는 ‘환경보호’ 명목으로 과속단속 강화와 유류세 인상 통해 서민생활 악영향(예: 출퇴근 노동자 피해) 우려 야기해 ‘노란조끼 시위’ 촉발
 - 반면, 그린 뉴딜 정책은 정부의 직접투자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며 교통·생활·산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둠
- 생계형 운전자 타격 주는 노후 경유차 규제 및 경유세 인상에는 신중 필요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으나(2019.2.26.) 실제 저감 효과는 의문시되며 큰 반발이 예상됨
- 향후 환경정책 추진시 정부·지자체 직접 투자와 취약계층 소득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 창출, 서민생활 개선 등의 시너지 효과 추구해야 함

【미국과 한국의 고용 및 소득불평등 관련 통계】

(단위 : %)

연도	미국				한국			
	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15~24세)	상위10% 소득비중	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15~24세)	상위10% 소득비중
2000	74.1	4.0	9.3	30.4	61.5	4.4	10.8	-
2001	73.1	4.7	10.6	-	62.2	4.0	10.2	-
2002	71.9	5.8	12.0	-	63.4	3.3	8.5	-
2003	71.2	6.0	12.4	-	63.0	3.6	10.1	22.1
2004	71.2	5.5	11.9	30.2	63.8	3.7	10.5	22.5
2005	71.5	5.1	11.3	-	63.7	3.7	10.2	22.9
2006	72.0	4.6	10.5	-	64.0	3.5	10.0	22.9
2007	71.8	4.6	10.5	30.5	64.1	3.2	8.8	23.3
2008	70.9	5.8	12.9	-	64.0	3.2	9.3	23.5
2009	67.6	9.3	17.6	-	63.0	3.6	9.8	23.0
2010	66.7	9.6	18.4	29.4	63.4	3.7	9.8	22.6
2011	66.6	9.0	17.3	-	63.9	3.4	9.6	22.6
2012	67.1	8.1	16.2	-	64.3	3.2	9.0	22.6
2013	67.4	7.4	15.5	30.2	64.6	3.1	9.3	22.3
2014	68.1	6.2	13.4	-	65.6	3.5	10.0	22.4
2015	68.7	5.3	-	-	65.9	3.6	-	22.3
2016	69.4	4.9	-	30.6	66.1	3.7	-	22.6
2017	70.1	4.4	-	-	66.6	3.7	-	-

자료 : OECD(각년도); World Bank(각년도).

【한국과 미국의 최고소득세율 추이】

(단위 : %)



자료 : OECD(각년도).

보 도 자 료

매수	참고자료	사 진	총괄담당 : 문미성 연구기획본부장 (031-250-3566)
2	×	×	내용문의 : 민병길 연구위원 (031-250-3177)
보도일시 : 2019. 4. 7. (일) 배포 즉시			

미 의원 오카시오의 ‘그린 뉴딜’,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시키는 사회개혁에 주목해야

<주요 내용>

-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진보적 사회개혁 정책인 ‘그린 뉴딜’ 내세우며 선풍적 인기 끌어
- 그린 뉴딜은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위해 고용보장 및 소득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개혁 정책
- 다수 이해관계자를 주권자로 참여시키며 보편적 혜택 제공해야 사회개혁 동력 확보할 수 있어

최근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카시오-코르테스 미 하원의원이 보편적·진보적 사회개혁 정책인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사회에서도 정책수혜자의 참여를 확보하며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생활조건 향상에 기반해야 사회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7일 미국에서 불고 있는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을 살펴보고,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이 주창한 ‘그린 뉴딜’ 정책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분석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 ‘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29세의 사회운동가이자 히스패닉 여성 정치인인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지난해 6월 민주당 경선에서 10선의 현직 의원을 꺾고, 뒤이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78.2%의 득표율을 얻으며 최연소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파격적인 소득·부재분배 정책을 공약한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생활조건에 처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정치 팬덤’을 형성할 정도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2017~18년의 유례없는 고용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불안정 고용이 주로 확산된 관계로, 임금상승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도 못 미쳐 미국의 가

계소득 회복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최근 2년간 미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산불, 강풍, 한파, 폭설 등 각종 이상기후에 시달렸으나 정치권의 극장 대응은 대중의 불만을 자극했고,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 집무실을 점거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오카시오-코르테스는 10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의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완전고용과 소득증진, 사회정의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의 직접투자 강화, 생활임금 및 고용보장 프로그램 운영, 노조 권한 강화 등 전방위적인 사회개혁이 담긴 그린 뉴딜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2020년 대선의 민주당 대표 공약으로까지 부상했다.

민병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 뉴딜 정책의 의의는 오랜 기간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린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보편주의적’ 기획의 부활이다”라며 “사회개혁 정책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주권자로 참여시켜야 사회적 주목과 확산력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 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보편적 생활조건 향상에 기반한 사회개혁 정책으로 대중의 지지 확보 ▲사회개혁 추진 시 정책 수혜자의 직접 참여를 통한 정치사회적 만족 필요 ▲사회개혁 추진 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 않도록 계층별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선행 등을 제시했다.

민 연구위원은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은 기후변화와 불평등 심화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라며 “경제 불안정에 시달리면서도 기성정치에 불신이 높은 한국 청년들을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아우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